

#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53호 2023. 6. 7. (수)

## 공 포

조례 제16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2
조례 제1601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7
조례 제1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조례 제16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9
조례 제160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조례 제1605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2
조례 제16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4
조례 제1607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6
조례 제1608호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32
조례 제16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조례 제16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조례 제16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조례 제161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0
조례 제16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조례 제161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43
조례 제161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조례 제1616호	일기수온용어등장치를위한부산광역시북구의회결산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반상조례일부개정조례등일괄개정조례	—47

## 고 시

제2023-6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풀소리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51
제2023-69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52

공										
람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미리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동일 위원회 내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④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등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의뢰를 받은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안건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② 원격지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임기의 기산일은 기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다른 자치법규·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 (제14조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출석 회의	1일(2시간)	·기본료 : 100,000원 ·초과료 : 50,000원	· 초과료는 2시간 초과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화상 회의	1회(2시간)	·기본료 : 50,000원 ·초과료 : 20,000원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제·개정(폐지) 이유

우리 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제1조 ~ 제4조)
-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제7조)
- 다.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재직·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제8조 ~ 제10조)
- 라.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한, 위원회의 통합·폐지(제11조 ~ 제13조)
- 마. 수당 및 여비(제14조)
- 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및 적용례, 다른 자치법규·행정규칙과의 관계(부칙)
- 사. 수당의 지급기준(별표)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1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4개 위원회의 정비(비상설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다음의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

조문	위원회명 (자치법규 제명)	소관부서
제1조	구정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기획감사실
제2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문화체육과
제3조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공원녹지과
제4조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을 “(구의 책무로)”로 하고,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span>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span>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span> </p> <p style="text-align: right;">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span>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span> </p> <p style="text-align: right;">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span> </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li>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li> <li>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 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li> </ol>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div>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복구청장 (인)           </div>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북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북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b>주민투표청구서</b>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 style="margin-left: 40px;">「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top: 20px;">복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북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 ■ 제·개정(폐지) 이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제4조)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안 제16조)
- 사. 부칙 개정 및 관련 서식 수정 (별표 1~7)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3호

##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액) 생리용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등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제3조~제4조)

다. 지원액, 중복지원 금지(제5조~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환수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22.12.08.)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개정(제9조제1항)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5호

##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교육 행사 지원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2조)
- 나. 대상, 구청장의 책무(제3~4조)
- 다. 사업의 공동추진, 경비 보조 및 지원, 공유재산 사용(제5~7조)
- 라.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포상 (제8~9조)
- 마. 시행규칙 (제10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6호

##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 제·개정(폐지) 이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마. 착한가격업소(영업자)의 협조사항(제8조)

##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등 및 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공공기관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계획 및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부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역 내 조례, 행정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위원 : 구 소속 각 국의 국장 및 관련 부서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두거나, 탄소중립 담당 부서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환경관련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 구와 구민의 책무(제1조~제6조)
-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제9조)
- 다.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제17조)
-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제18조~제25조)
-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제26조~제32조)
- 바.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부칙 제1조~제4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8호

##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 제1항에 따른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의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4.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제4조~제5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마.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제8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09호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육군 제6339부대6대대장”을 “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북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을 각각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가.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인 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

나.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소재지를 위원 구성의 기준으로 하는 조항을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관할구역으로 변경

다. 북구청 내부 위원 지정 조항을 변경하여 재난관련 계획 및 예산 등의 사전 검토 효율성 추진

### ■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제3호의 “육군 제6339부대6대대장”을 “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개정.

나.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북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을 각각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으로 개정

다. 제3조제1항제7호의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개정

라. 제5조제1항 본문 중 “직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개정

마. 제7조제5항 본문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개정

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비상설화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0호

###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으로, “안녕질서,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열리는옥외행사의”를 “안녕질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말한다.
- 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국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
- 다.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에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최·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을 “북구 보조금을 지급받는”으로, “단체가옥외행사”를 “단체가 옥외행사”로, “신고률”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북구 또는 북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북구 또는 북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구청장”을 “그 밖에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③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참여시켜야 한다”를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 ■ 주요내용

가. (제3조) 조례 적용범위를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까지 포함

나. (제6조)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민간 방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 및 직무대행·연임 규정 마련

##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2020. 6. 16.시행)반영 (소집수당)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제7조제2항 삭제 및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제7조제2항) 소집불응에 따른 제제규정 삭제
  - (제7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및 단가에 관한 조항 신설
  - (제7조제4항) 소집수당의 1일 최대 시간 및 예외조항 신설
  - (제7조제5항)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조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에 따른 임원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 및 연임규정 정비

1) 단장, 부단장 모두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보완(제3조제3항 변경)

- (제3조제3항) 단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만 있어 단장 및 부단장 모두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추가하여 변경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보완(제3조제6항 변경)

- (제3조제6항) 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2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경비·미화 용역업체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종사자에게 기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 보조금
2.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연계
4.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및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관리종사자에 대한 지원범위(제5조)
- 나.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제6조)
- 다. 교육 및 홍보(제7조)
- 라. 시책추진 기여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제8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에서 자전거 법 및 시행령 기준과 일치(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

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 설치 근거 신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4호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대상 업무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건설, 건축, 회계, 복지, 세무, 사회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

**제7조(자문위원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이 자문을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정 자문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코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자문대상 업무 범위
- 나. 제3조~제5조 : 자문위원 위촉 사항, 자문위원의 임기 및 의무
- 다. 제6조~제8조 : 자문의 절차, 자문위원 해촉, 실비보상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의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내용 및 횟수	부과기준 금액
서류 미제출	미제출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미제출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선 서 거 부	거부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증 언 거 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전체거부 1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위반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기준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9조제5항 : 출석증언 등 요구 받은 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나. 제9조제7항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16호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6.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 및 여비지급)”을 “(실비보상 및 여비지급)”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검사위원의 위·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전원 또는 1명”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무수행”을 “출장경비는 공무수행”으로, “출장경비는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직자 행동율”을 “「공무원헌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친절·공정·근검·절약)”을 “(친절·공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직자의 행동율 (제5조제2항 관련)”을 “공무원 헌장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에게는”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를 “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등을”을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심의 등”으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를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수당은”을 “시험수당은”으로 한다.

**제9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를 “심사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회의규칙 및”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및”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0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을 “제출받아 법”으로 한다.

**제1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사 건 실 적 부”를 “자 문 실 적 부”로 하고 내용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를 “법 제150조”로 한다.

**제14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를”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 의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5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원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원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북구의회”로,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을 “참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으로,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조 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증인등의”를 “증인 등이”로, “체제한”을 “머무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약칭 표현,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조문 체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의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약칭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이후 조항에서 약칭 표시사항 규정
- 나. 용어, 구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 다. 별표(제3조, 제12조) 제목 수정 등 이상 총 15개 조례 일부개정

##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6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풀소리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17호(2007.05.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377호(2007.10.03.)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56호(2023.4.19.)호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된 풀소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 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구(공원녹지과☎309-20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60-4번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명칭 : 풀소리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4. 사업의 규모 : A=1,500.0㎡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7. 사업비 : 금429,300천원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북구 만덕동	960-4번지	공	1,500.0	1,500.0	부산광역시 북구	-	-	-	-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69호

###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330번가길 9 외 1건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0건)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금곡대로330번가길 9	2023-06-07	건축물대장 말소
백양대로1160번길 18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6.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